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1	시민권력 강화-전면 정치개혁으로 노동자-시민 중심 정치 실현	분	야* 정치
<p>○ 목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보수정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’ 타파 - ‘노동자·시민 중심의 정치-직접민주주의 강화’ 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.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로 시민권력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 직접, 대통령-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- 국민 직접, 국회 해산권 도입 - 국민발의제, 국민투표권 도입 - 주민소환, 주민투표, 주민발의제 실질화 <p>2. 전면적인 정치개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통령·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- 국회의원 특권 폐지-국회의원·지방의원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- 국회 교섭단체 폐지-국회운영위 및 상임위별 운영위로 기능 대체 -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제도 폐지-독일식 국고보조금제도 도입 - 정당법 개정: 정당 설립요건 폐지, 선거연합정당, 지역정당 허용 <p>3. 정치기본권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보안법·테러방지법,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-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·정치활동 보장 -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즉각 추진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도의 재원 필요 없음. 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2	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민주·생태·돌봄 중심 공공경제 실현	분 야*	경제
<p>○ 목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필수/기간산업을 노동자·시민의 민주적 참여 하에 공영화하여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의 한국경제 개혁 - 기후위기, 고용위기, 돌봄위기를 해결하는 민주·생태·돌봄 중심 공공경제로 한국경제 구조 전환 <p>○ 이행</p> <p>1. 부자-불로소득 중과세(법인세 최고세율 인상, 보유세 강화, 소득세 종합과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 40% 이상 상향 - 금융·임대소득 종합과세, 모든 개발이익 환수 - 토지보유세 강화-대기업 대주주 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세 신설 <p>2.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투자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투자은행을 설립으로 ▲필수산업 공영화 ▲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▲국가책임 기후·돌봄일자리 창출 <p>3. 에너지-통신 등 필수산업 공영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, 통신, 교육, 통신, 플랫폼, 주택, 수도, 의료, 돌봄영역 공영화 - 민주적 운영구조: 해당산업 종사 노동자·시민의 운영과정 참여 보장 - 공적자금 투입 기간사업 공영화 <p>4. 약탈금융 종식과 삶을 위한 공공금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중은행 공영화로 약탈금융 종식 - 한국은행법 전면개정으로 금융운용의 질적 전환: 한국은행 주 운용목적은 고용안정과 국민생활 보장으로 명문화 - 연기금 운용기조 전환: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 사회적 목적으로 전환 			

- 고리사채 무효화, 저소득층 부채탕감
- 법정이자 최고한도 15%로 제한
-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대출하는 서민 공공금융기관 설립

5. 공공토지 확대

-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
-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와 공공개발 의무화
- 토지임대부주택-환매조건부 분양 확대
-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환수(기업보유 유희부지 공공택지화)
- 투기 불로소득 환수, 토지 보유세 인상 또는 지분 납부 등으로 공공토지 확대

6.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과 국가예산 민주화

- 매년 국가재정 1천조 투입: 기후정의, 국가책임 완전고용, 인간다운 국가책임 돌봄·복지 실현
- 파산-취약계층 지원: 파산-취약계층 지원 조건 완화 및 재정 지원
- 국가예산의 민주화: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박탈, 독립적 국가예산위원회 설치로 국가예산 운영 민주화

○ 이행기간

- 2024~2028년, 연별 계획을 수립하고, 평가를 통해 계획 재수립 및 추진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기업·부자증세: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 40% 이상 상향, 금융·임대소득 종합과세, 토지보유세 강화, 대기업 대주주 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세 신설, 모든 개발이익 환수, 군비 축소
- 연기금 투자, 정부의 국채 발행,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3	기후정의법 제정으로 기후정의 실현	분	야* 환경
<p>○ 목 표</p> <p>- '기후악당-생태파괴 국가'에서 '기후위기 극복-정의로운 전환-생태사회'로 전환</p> <p>-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'기후위기 극복 국가책무' 헌법 조항 신설- '기후정의법' 제정</p> <p>2. 전력/가스 민영화 중단-전력공기업 통합-에너지산업 재공영화</p> <p>- 발전회사 공공적 재통합-재생에너지공사 설립: '공공재생에너지법', 6개 발전회사를 재통합하는 '발전공사법' 제정</p> <p>- 공적 소유형태의 재생에너지 확대</p> <p>- 통합발전공기업 운영구조와 전력생산-전달-소비과정에 대한 민주적통제</p> <p>- 가스직도입제 · 가스민영화법 폐지, 에너지산업 재공영화</p> <p>3. 탈석탄-탈핵 및 2050년까지 100%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</p> <p>-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</p> <p>-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</p> <p>-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비정규직 포함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</p> <p>- 농지와 산림을 해치는 태양광발전 금지-유희부지와 건물 주차장 활용</p> <p>- 30년까지 공공재생에너지 30% 확대, 50년까지 100%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</p> <p>4. 생태적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및 도보 · 자전거중심 이동체제 구축</p> <p>- 철도수송분담률 50%까지 확대</p> <p>- 자동차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로 전환: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중단, 도심지 교통혼잡료 징수 확대 및 주차장 축소, 차없는 거리 확대 등</p> <p>- 버스완전공영제, 광역단위 대중교통 정액이용권 도입 및 단계적 무상화</p> <p>5. 기후일자리 대폭 창출,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의로운 전환</p> <p>- 탈탄소 에너지-공공교통-건물 확대 및 돌봄일자리 창출</p>			

- 주4일 노동제 도입

6. 기후위기 가속하는 개발중단 및 자연휴식제 도입

- 가덕도, 새만금, 제주 제2공항, 흑산도, 울릉 등 신공항개발 중단
- 설악산, 지리산 케이블카 등 개발 중단
- 자연휴식제 도입으로 산림생태계 및 해양생태계 보호

7. 탄소다배출기업 탄소감축 강제제도 실시

-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,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
-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 혜택 폐지

8. 탄소무배출 건물의 확대 및 탄소다배출건물 탄소부담금 부과

-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건물까지 확대
- 탄소다배출 건물에 대한 탄소부담금 부과

9. '제로 웨이스트' 사회 구현

- 산업폐기물 발생량과 처리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, 폐기물 운송·수집·처리업 무 전면 공영제 도입
- 일회용 플라스틱, 비닐 생산 금지, 플라스틱 폐기물 보증금제 도입
- 생태오염·주민민원 발생 생산시설에 대한 통제·환수법 제정

10. 농축산업의 생태적 전환

- 공장식(밀집사육·감금틀 사육) 축산 폐지를 통한 축산업의 생태적 재편
- 생태유기농업-재생농업 확대, 생태적 전환에 따른 농축산가구 국가 지원

○ 이행기간

- 2024~2050년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기후정의를 위한 '누진세' 도입 + 기후대응기금 + 전력기금 + 기업탄소부담금 + 연기금 투자 등으로 연 40조 이상 확보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4	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실현	분	야* 보건/복지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기반 공공 통합돌봄체계 도입으로 사회적 권리로서의 돌봄권 보장 - 가사/돌봄노동의 가치 인정, 성평등한 가사/돌봄노동 분담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: 사회적 권리로서의 돌봄권, 돌봄서비스의 공적 책임, 지역 기반 통합돌봄, 돌봄노동의 가치인정, 이용자-노동자 돌봄기관 운영 참여 명문화 2. 지역 기반 공공 공급체계 구축; △어린이집·요양시설 국공립화(민간위탁 시설 재공영화) △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치 △읍면동 통합공공돌봄센터 설립 3. 의료-돌봄 통합과 간병서비스 국가책임: △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 간병비 포함 △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4. 돌봄노동자 직접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: △사회서비스원 확대·읍면동 공공통합센터 설립으로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△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△가사/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, 적정노동시간 보장 5. 성평등한 가사/돌봄노동 분담 : △주4일제 도입으로 가정 내 성평등한 가사/돌봄노동 분담조건 조성 △고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보호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보장 △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통상임금 100%로 상향 △육아휴직 기간 3년, 육아휴직 쿼터제 도입 6. 가정 내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: 1인 가구 포함 가족수에 따라 주가사돌봄노동 담당자에게 ‘돌봄수당’ 지급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~2028년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벌-부자-불로소득 증세, 국민연금 투자 등 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5	공공 복지체계로 기본권 보장	분	야* 보건/복지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-주거-교육-교통-에너지-통신 공영화로 기본권 보장 - 사각지대 없는 복지제도 구축 -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주거 : 투기·블로소득 차단-공공주택 확대로 주거권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: 깡통전세-전세사기 피해자 구제(선구제-후구상) - 민간임대업 특혜 폐지 -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: 지역표준 임대료제 도입, 임대차 기간 연장 - 공공주택 1,000만호 공급: 공공선매권제도로 기존 주택 매입, 신규공공주택 공급 <p>2. 의료: 지역공공의사제-공공의료 확대로 건강권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격차 해소-필수 의료 강화: 지역공공의사제 도입, 보건의료 인력 확충 - 병원·공공공공병상 확대: OECD 수준(공공병원 50% 공공병상 70%)으로 단계적 확대 - 무상의료·공공주치의제 단계적 도입: 어르신-아동부터 도입하여 전국민으로 확대 - 간병비 건강보험 보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- 민간의료보험 규제-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법제화 <p>3. 교육: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-단계적 무상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등교육 전면 개편: 기후생태-인권교육 강화, 고교학점제 폐지 - 입시폐지: 수능시험 폐지, 대학입학 자격고사 실시 - 대학서열 폐지-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로 공공대학체제 도입 - 대학등록금 단계적 폐지 - 학생인권법 제정,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 권리 보장 -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 철폐 <p>4. 공공교통 체제로 교통권(이동권)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중교통 공영화: △버스 완전공영제 및 마을버스 공영화 △민간도시철도 재공영화, 			

외주사업 직영화 △KTX·SR 통합

- 철도 중심 통합 공공교통체제 구축: 철도(지하철)-버스(시내버스, 광역버스, 마을버스) 공영화에 기초해 이동생활권(광역단위) 내 통합공공교통체제 구축
- 이동생활권 무제한 정액권(프리패스)·청소년-어르신부터 교통요금 무상화

5. 에너지: 공공에너지체제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

- 공공 에너지체제 구축: 발전공기업 통합, 민간공급 도시가스 공영화
- 에너지 기본권 보장: △빈곤층 에너지 무상 공급 △가정용 필수 전기/가스 사용량의 요금 인하. 이후 완전 무상무상정책 도입 △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
- 요금체계 개편: △가스요금 누진제 도입 △전기요금 누진제 강화
- 대기업 특혜 폐지: △산업-상업용 요금 인상 △경부하 요금제 폐지

6. 통신: 통신비 인하와 통신 공영화

- 온국민 통신정액제(기본요금제) 도입: △기본료 폐지 △인터넷과 전화를 포괄하여 필수데이터 사용에 대한 저렴한 정액제 도입 및 추가되는 데이터 양은 누진제 적용 △저소득층 통신비 무상 지원
- 통신 공영화: △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△통신3사 국유화(공기업화)

7.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복지제도 구축

- 4대보험 강화: △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4대보험 적용 및 보장성 강화 △4대보험 자본 부담률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△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%로 상향(OECD 평균) △상병수당 도입
- 공공부조 강화: △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급여 선정기준 상향(현행 중위소득의 32%(생계), 40%(의료)를 50%로 상향) △노인기초연금 수급액을 단독(40만원), 부부(70만원)로 상향.

○ 이행기간

- 2024~2028년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재벌-부자-불로소득 증세로 국가 재정 투입+국민연금 투자+군비 축소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6	노동·고용정책 대전환으로 노동권-일자리-생활임금-생명안전권 보장	분	야* 노동/안전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시간 단축,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으로 생존권·존엄권 실현 - 노동·고용정책 대전환으로 노동권·일자리·생활임금 보장 - 노동자-시민의 생명안전권 보장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, 기후정의 실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4일제로 법정노동시간 단축 - 점심시간의 노동시간 포함, 여름·겨울 휴가기간 확대 - 단시간 노동 사용 제한 및 차별 철폐 <p>2. 불안정 노동 철폐,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견법·기간제법·다단계하도급 철폐,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 -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제: 돌봄·사회서비스·의료·안전·기후일자리 확대 - 산업전환 노동자 충고용 보장 <p>3.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노동자(5인 미만 사업장, 특수고용·플랫폼, 가사 노동자, 프리랜서 등)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- 단시간 노동자 차별 철폐 -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철폐 및 노동허가제 전환 - 노동·노동권 정규 교육 과정 포함 <p>4.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저임금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- ‘물가-임금연동제’로 실질임금 삭감 방지 -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로 중간 착취 금지-공공·노조가 담당하는 취업 알선 			

5. 노조할 권리 완전 보장

- 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
-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철폐 등 노조 활동 제한 금지
- 산업별, 지역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
- 교원, 공무원노동자 포함 노동자,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

6. 안전한 일터, 쉴 수 있는 권리 보장

- 온전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시민의 참여권 보장: △기업의 영업비밀 철폐로 노동자시민의 알권리 보장 △사고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와 주민의 사고조사 권리 보장
- 위험의 외주화 중단
-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강화
- 특수고용,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
- 일하는 모든 이에게 산재·고용 보험 보장, 육아휴직 보장
- 일하는 모든 이에게 상병수당·질병휴가 제도 도입

7. 안전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

- 생명안전기본법 제정: 위험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, 사고예방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권리를 보장. 재난·참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
- 헌법에 '안전권' 신설
- 화물안전운임제 도입

○ 이행기간

- 2024년 내 즉각 도입: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, 생명안전기본법 등
- 국가책임 일자리 대폭 창출은 2030년까지 1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재벌-부자-불로소득 증세
- 국민연금 투자
- 3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7	여성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	분	야* 여성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성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-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일터에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평등공시법 제정: 모든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적용 - 성별에 근거한 임금 및 고용형태 차별금지, 위반 기업 강력 제재 - 가사/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: 근로기준법 적용, 적정임금·적정노동시간 보장,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가사·돌봄노동자 직접고용 <p>2. 성평등 가사/돌봄 분담제도 구축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평등한 가사/돌봄 분담: △주4일제 도입으로 가정 내 성평등한 가사/돌봄노동 분담조건 조성 - 읍면동 공공통합센터 건설로 가사/돌봄노동의 탈성별화, 탈가족화, 탈시장화 <p>3. 여성에 대한 폭력 중지와 예방조치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동의강간죄 도입: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“폭행 또는 협박으로”를 “동의 없이”로 개정 - 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, 성폭력피해자회복지원법 제정 · 지자체별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회복지원기관 설치 ·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 ·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조항 폐지, 교제폭력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적용, 처벌 ·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- 성폭력 예방조치로서의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모든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으로 포괄적 성평등교육 실시 · 고위공직자 및 임용후보자 대상 반성폭력교육 법정 의무교육화 · 초·중·고·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			

-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독립적 사건해결기구 설치 의무화
 - 외부 전문위원 포함 의무화
 -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업무정지, 피해자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위한 권한 부여

(4)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

-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
-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,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,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 적용
- 근로기준법 유산·사산휴가 적용범위에 임신중지 포함
- 태아산재법 일터 적용 안착화, 태아산재법 개정 보완(아버지 태아산재 인정, 소급적용기한 확대, 보험급여 확대)
- 이주·장애여성 배제 없는 지역재생산권리센터 구축
-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

(5) ‘조용한 학살’ 방지법 제정

- 법제정을 통한 젠더적 관점의 국가책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
- 여성 및 성소수자 전문 정신건강서비스센터 설치, 심리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

○ 이행기간

- 국가책임 지역-공공 통합돌봄체계 도입: 2024~2028년
- 나머지 공약: 2024년 내 도입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재벌-부자-불로소득 증세로 국가 재정 투입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8	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평등사회 실현	분	야* 기타(소수자)
<p>○ 목 표</p> <p>- '차별-배제'에서 '평등-포용'으로 한국사회 패러다임 전환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평등과 포용으로의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</p> <p>- 여성·성평등 업무 전담부서로 여성가족부 개편(정부조직법 개정)</p> <p>2.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</p> <p>3.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</p> <p>(1)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: 혼인평등법 제정</p> <p>(2) 성소수자를 범죄화하는 악법 폐지: 균형법 제92조의6(추행) 등</p> <p>(3)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</p> <p>- 성별정정 요건 완화,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실시, 주민등록번호 완전난수화</p> <p>- 성별정정 목적의 의료조치, 의료보험 급여화</p> <p>4. 장애인 기본권 보장</p> <p>(1)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</p> <p>- GDP 4% 장애인 예산 보장, 장애인 제반권리 명시</p> <p>-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 신설</p> <p>(2) 장애서비스법 제정</p> <p>-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 및 자부담 폐지: 국가장애서비스공단으로 지역사회 24시간 개인 맞춤 지원서비스 제공</p> <p>- 국가장애서비스공단 활동지원사 직접고용으로 노동권 확보와 안정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</p> <p>(3) 장애인 이동권 보장: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,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일원화 및 공영화, 휠체어 접근 가능 시외·고속버스 도입 의무화</p> <p>(4) 장애인 노동권 보장</p>			

-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
- 국가 책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확대

(5)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

-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, 단계적 전면폐쇄, 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
- 탈시설 지원예산으로 ‘자립생활 권리’ 보장

(6) 장애인 교육권 보장

-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을 위한 ‘장애인평생교육법’ 제정
- 특수학급 의무화, 통합교육 지원인력 및 장애인교원 대폭 확대

5. 학생·청소년의 권리 보장

- 학생인권법 제정
- 청소년보호법 폐지
- 정당법 및 선거법 등 개정으로 온전한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
- 탈가정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: 청소년쉼터 대폭 확대, 입소 절차 간소화, 생활 지원금 지급

6. 난민·이주민 권리 보장

- 단속추방 금지, 구금 기간 제한
- 건강보험 등 차별 없는 사회보장
- 이주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, 의료, 체류,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
- 경제적 난민 인정 및 보호,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 마련
-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
- 근로기준법 제63조(예외근로자 규정) 폐지, 차별 없는 4대보험 적용
- 이주여성 재생산권 보장: 임신·출산에 따른 산전·후 휴가 보장 및 차별없는 재생산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보장
-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마련

○ 이행기간

-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‘제 차별 철폐-권리보장’ 법조항 및 정책 즉각 도입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부자-재벌-불로소득 중과세, 군비 축소로 재정 투입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9	지역격차 해소-지방자치 강화	분	야* 행정/자치
<p>○ 목 표</p> <p>-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강화,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소멸 억제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강화</p> <p>(1)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: △예산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△해당 사안의 반영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공개 제도화</p> <p>(2)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: △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△처리기간과 처리과정 공개의 제도화</p> <p>(3)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부담</p> <p>(4)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: △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청 설립 △충액인건비 제도 폐지, 주민 통제 하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 수 결정</p> <p>2. 지역격차 해소</p> <p>(1)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격차 해소: △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, 각종 개발이익 환수 △중앙정부 재정책대와 발맞춰 지방교부금 확대 △지방세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 등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</p> <p>(2)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: △돌봄 분야 공공 일자리의 비수도권 지역 우선 확대 △비수도권 지역내 공공 문화서비스 및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관련 일자리 확보</p> <p>(3)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체계 대폭 개선: △비수도권 지역 광역전철망 구축 및 광역 단위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 도입 △지역 내 대중교통 공영화(다양한 모델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공영화) △대중교통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며,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추진(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 지원 대폭 확대)</p>			

(4)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: △건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확대 △지역공공의사제 도입 및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△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 대폭 강화 및 방문진료, 정신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△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억제

(5)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: △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방캠퍼스에 대한 전략적 국고지원 강화 △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한 연구비 우선 배정 등 각종 국고지원 강화 △ 지역 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&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대학의 역할 강화

(6)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: △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 차등화 △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각종 지방세 세율 차등화 및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 부과

○ 이행기간

-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강화는 즉각 추진
- 나머지 정책은 2024~2028년 내로 완료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부자-재벌-불로소득 중과세, 군비 축소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노동당		
정책번호 10	한반도평화협정 체결-한반도 비핵지대화	분 야*	통일/외교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북 대결, 미중패권 경쟁으로 인한 ‘이중의 한반도 전쟁위기’ 해소 - 한반도평화체제 구축-핵없는 한반도 실현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전쟁위기 부추기는 한미동맹, 한미일 동맹 폐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미연합훈련 · 한미일 연합훈련 · 인도-태평양 지역 다국적군 훈련 참가 중단 -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-한미동맹 폐기 - 한미일 동맹(캠프데이비드 선언) 폐기 -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-보상,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 반대,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 - 사드 배치, 제주2공항 · 새만금공항 건설 중단 <p>2. 핵없는 한반도 실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의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- ‘한반도 비핵지대화’ 를 기초로 한 ‘동북아 비핵지대화’ 실현 <p>3.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획기적 군비 축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화협정 체결: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/중/미와 분단 당사자인 남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-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공격적 군사전략과 군비확충 폐기 - 군비 축소로 민생위기 · 기후위기 해결 <p>4. 무기 수출 전면 중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쟁지역을 포함한 무기 수출 전면 중단 - K방산 주력수출산업 정책 폐기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~2028년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원 필요 없음 			